

폐캔 재활용 산업 활성화,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

캔압축기 분야는 자판기산업에 있어 엄연한 유관분야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판기를 통해 캔음료가 유통시 그 최종단계에서는 반드시 빈캔이라는 부산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를 유기적으로 수거해 환경과 재활용 정책에 일조 할 수 있는 캔압축기는 비록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산업계 필요성이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판기 옆에서 캔압축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듯 캔압축기 업체들의 사업활동도 미미하기 그지없는 게 현실이다.

그저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한 존재로서 산업의 가느다란 연결고리를 잡고 있는 현실에서 캔압축기 업체들이 느끼는 고충이 적지 않다. 아무리 좋은 성능의 제품을 만들고, 환경산업에 일조 한다는 자부심을 위안 삼는다 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성과에 업체들은 언제까지 앞날만을 기억하고 있기 힘든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에 있어 캔압축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폐캔회수장비생산자협의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활용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캔압축기 산업분야가 고사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건의의 배경이다.

본란에서는 이같은 한국폐캔회수장비생산자협의회의 정부 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의 캔압축기 업체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향후 재활용 산업이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의 내용

‘한국폐캔회수장비생산자협의회’ (가칭: CREA, 이하:협의회)는 폐캔의 회수 및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캔발생단계에서 원천적 감량 및 분리 수거되는 장비인 캔압축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모임이다. 이 협의회에는 현재 캔압축기 분야의 사업을 주도해 가는 대원테크, 명성상공, 미래환경산업, 신산디앤알 등 4개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바라면서 관련업체가 처한 현실과 제안을 담은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우선 재활용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캔압축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가격 경쟁력 (외국산의 1/2)과 우수한 품질(압축, 분리)을 갖춘 우리 장비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의 재활용 산업 활성화 정책에 깊은 의구심을 갖는다는 불만을 피력했다.

협의회의 이같은 불만은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의지와 실천노력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예로 지난 10여년간 환경부가 관심을 가진 것은 캔압축기와 관련한 2회의 설치협조 공문발송이 전부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캔압축기 재활용 제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고 기껏 현 생산자단체인 한국금

속캔재활용협회'의 활동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해당 지자체 재활용기관의 무관심 요인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현재 빈캔의 회수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회수, 선별관리에 많은 인건비, 물류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가절감 방안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현대식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세계로 폐캔 재활용 과정 중 초기단계에 참여하는 부분(주민, 장비생산자, 설치자, 수집자등)의 역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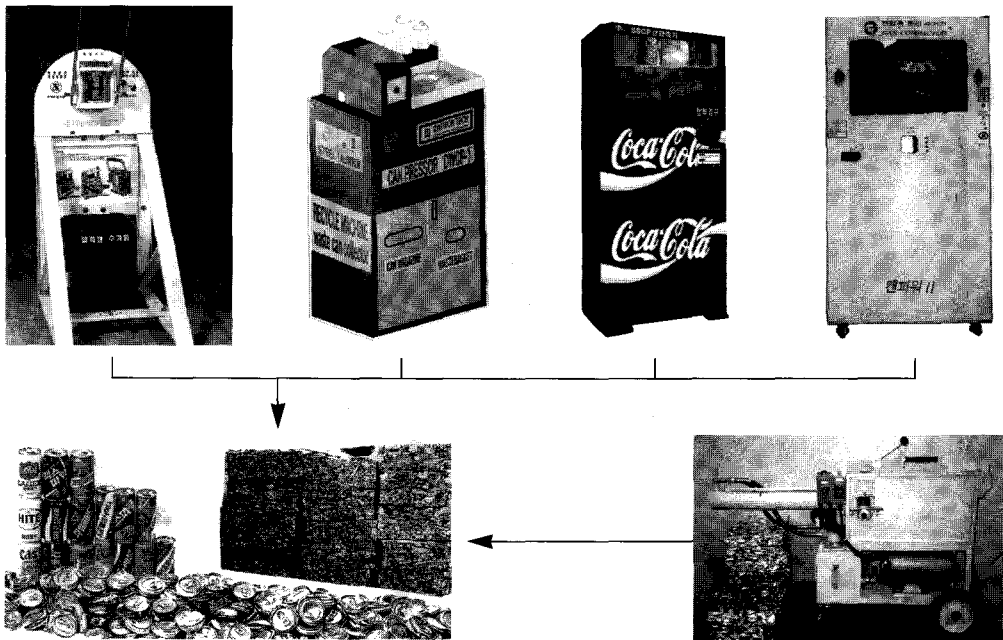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예치금(반환) 제도는 철캔소재 판매로 이익을 보는 철캔재료 제조사나 알루미늄캔에 비해 저렴함을 이유로 철캔을 사용 확대하고 있는 음료회사, 그리고 재관회사 주 회원으로 있는 '한국 금속재활용협회' 회원들만이 수혜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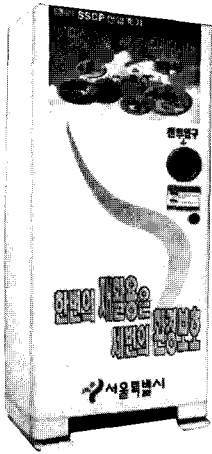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에서 보다 합리적인 폐캔재활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현재의 '예치금제도'는 향후 시행예정

인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되는지, 선진국의 경우처럼 폐캔의 최종 배출자인 주민 및 참여자 모두에게 실질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이 실시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의 경우에는 캔압축기를 통해 압축시 10원이든 20원이든 일정 경제적 이익이 부가되어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큰 참여동기를 유발시키기 힘들다는 시각을 밝혔다.

결국 협의회에서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캔압축기 산업이 자체적으로 활로를 찾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재 협의회 산하 4개 업체들은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 및 벤처기업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국내 환경에서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판로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도산위기에 처했거나 전업을 고려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극복할 해법을 정부에서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아직 뚜렷한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





다. 다만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검토, 차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산적과제만 많은 열악한 산업현실

정부의 무관심 요인 이외에도 캔압축기 시장의 애로점으로 캔음료 포장이 규격화가 되

어 있지 않은 요소, 캔재질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캔자판기에 사용되는 캔음료는 자판기에 장착된 랙크 규격상 국제적으로 200ml, 250ml, 300ml용기 포장으로 제조 공급되게 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 생산되는 캔규격은 180ml, 190ml, 220ml, 330ml등 규격이 상이하며 자판기 투입시 썸고장 발생을 수시로 시키고 캔압축기 개발 상품화에 있어서도 고단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캔재질의 문제점으로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경우 식품 캔을 제외한 음료수, 주류 캔의 경우 알루미늄캔만 사용함에 비해 국내 포장비가싼 철캔과 혼합 사용함에 따라 이 역시 캔압축기 제조상 고단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국내 캔압축기는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통식의 경우 기계의 가격대가 재활용기로서 설치에는 벽찬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캔압축기를 설치하고 싶은 업체들도 높은 가격요인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캔압축기 시장은 여러 악재요인이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활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가 철저히 자율에 있듯 산업의 현실도 제반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대정부 지원도 없는 현실 하에 외롭고

도 힘든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앞날만을 보고 사업을 하는 캔압축기 업체들의 현실은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업체의 체산성은 더 나빠지고 사업의지 역시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캔압축 분야가 유명 무실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모두의 관심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제는 보다 캔압축기 업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업계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환경부에서는 고사상태에 처한 업체의 현실을 고려해 캔압축기를 통해 재활용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비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판기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캔용기의 수거와 재활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존 자판기 로케이션에 설치를 확대시켜 나가는 성숙한 운영의식의 고양이가 절실히 요구된다. 자판기도 언제까지 환경 및 재활용 문제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판산업계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 부분에 적극 대응해 갈 때만이 환경과 조화된 전정한 자판기 문화를 구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선 당장 캔압축기 분야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앞서 협의회의 대정부 건의 내용에서 언급했 듯, 수거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캔 고철가격에 예치금,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불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이 활성화 되었던이 우리도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하루 빨리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는 결코 어느 한분야의 몫이 아닌 관련분야 모두의 몫이다. 캔압축기 생산자, 정부, 자판기 분야, 국민들이 재활용 의식 고양이라는 근본적 취지 하에 유기적으로 역할을 공유해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장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